

학회소식

대한변협-한국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변호사)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대환 교수)는 지난 11월 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통일을 대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하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를 주제로 하는 허영 한국공법학회 고문(경희대학교 석좌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제1주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한 공법적 과제'로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명섭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지정토론자로는 송인호 한동대 교수와 안동인 영남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제2제는 '최근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의 몇 가지 공법적 쟁점들'이며 제1주제와 동일하게 정영훈 인권이사가 좌장을 맡았고 주제발표는 김병기 중앙대 교수가 하였다. 토론에는 문강석 변호사와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 정립'에 관한 제3주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이은영 변호사와 김정현 전북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유럽헌법학회(회장 전학선 교수)

유럽헌법학회(회장 전학선 교수)는 지난 10월 19일(토) 13:30~18:00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15-1동) 303호에서 『시민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과제』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정보기관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제: 정문식 교수 (한양대)
- 이재민 임시 주거 지원 법제에 관한 고찰 - 일본 법제와의 비교 및 독일의 보장국가론 적용을 중심으로: 황지혜 박사 (한양대)
- 국민발안제의 비판과 그 대응에 관한 연구 - 프랑스 논의를 중심으로: 강명원 교수 (한국외대 초빙교수)
- 소셜 미디어 규제의 정당성과 효용성에 관한 일고: 권은정 박사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선임연구원)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명예교수)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 명예교수)는 오는 12월 14일(토요일) 13:30~18:0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5층)에서 『건축법과 주거복지법의 현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건축법상 위원회의 역할과 법적 검토 - 통합건축위원회에 따른 건축허가여부의 집중문제 -:한상훈 교수(중원대학교)
- 10.1. 부동산대책에 대한 법적 검토 - 주택임대업규제를 중심으로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
- 주거복지의 법정책 - 독일의 지불가능한 주거와 건축연대와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법적 고찰: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검토: 홍선기 교수(국회 의정연수원)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 교수)

한국민사법학회(회장 김대정 교수)는 지난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로

스쿨 국제학술회의실에서 ‘제9회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민사법학회를 비롯해 중국 민법학연구회, 일본사법학회, 대만민법연구기금회 등 4개국 민법학회가 1년마다 돌아가며 주최하는 동아시아 민법학계 축제의 장이다. 2011년 첫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래 한국에서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이날 △부동산 물권변동의 원인행위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의 효력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절차상의 여러 문제 △한국민법전의 동산물권변동 등을 주제로 양창수(67·사법연수원 6기) 한양대 석좌교수와 권영준(49·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최건원 칭화대 교수, 양리신 인민대 교수, 쉬정시엔 대만정치대 법학원 교수, 우충저우 대만대 법학원 교수, 이시다 타케시 히토츠바시대 로스쿨 교수, 아베 유스케 도쿄대 로스쿨 교수 등이 발표하고 토론했다.

동 정

김준기(연세대학교 법전문 교수)

연세대 로스쿨의 김준기 교수가 최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사건의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됐다. ICSID에 따르면, 김 교수가 의장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건은 말레이시아의 통신 재벌이 네팔 정부를 상대로 약 3억 5000만 달러를 청구한 투자자중재(ISD) 사건으로, 네팔 정부가 피소된 첫 번째 ICSID 사건이기도 하다.